

통일을 대비한 남북한 교육 협력 발전을 위한 정책적 방향

최은수*

목 차

- I. 서론
- II. 남한 교육의 성장과 발전
- III. 북한 교육의 성장과 발전
- IV. 남·북한 교육제도의 비교 분석
- V. 통일을 대비한 남·북한 교육 협력 발전의 정책적 방향

I. 서론

인간이 여느 동물과 다른 점 중의 하나는 나름대로의 독특한 문화를 창출하는 것이며, 이러한 문화적 활동을 통하여 인간은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또한 민족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해 나간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성장과 발전은 어떠한 힘에서 비롯되는 것일까? 그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개인과 사회, 그리고 민족에 대한 교육의 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은 인간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그것이 형식적이든 비형식적이든 어떠한 형태로든지 인간의 삶 속에서 그 활동이 계속되어 왔다. 옛날에는 비록 원시적이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들판으로 데리고 나가서 사냥하는 법을 가르치고, 어머니는 딸을 데리고 가정에서 길쌈과 요리하는

* 人文大 敎職科 副敎授

법을 가르쳤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는 인간은 고도의 첨단 장비를 가지고 의식주를 해결하는 방법을 전문가를 통하여 배움으로써 그 옛날보다도 더 풍요로운 삶을 즐기고 있다. 그만큼 교육의 활동이 다양화되고 근대화되는 만큼 인간의 문화도 새롭게 창조되고 발전되면서 인간의 삶도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더욱더 성장하게 된 셈이다.

인간의 역사를 통하여 개인과 사회, 나아가 민족의 성장과 발전의 주요한 밑거름이 주로 교육의 역할과 활동을 통하여 이루어져 왔다고 볼 때에, 우리의 제일의 관심사는 역시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한반도의 남한과 북한의 경우이다.

그 동안 남북한을 중심으로 한 한반도의 정세는 80년대부터 90년대 초에 들어서기까지 국제적인 해빙 무드와 아울러 남북한 각자의 국내 사정으로 인하여 쌍방 대화가 진전되고 상호 교류와 협력이 활성화되는 등, 한동안 남북 통일의 분위기는 무르익어만 갔다.

그러나, 남북한은 끈이어 발생한 '핵문제', '전쟁 위기론' 대두, 카터의 중재에 힘입은 역사적인 남북한 정상회담을 위한 예비 접촉, 김일성 사망과 관련한 '조문 파동', 북한에 대한 남한의 쌀 공급과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를 통한 협력안 체결, 최근의 '잠수함 사건'과 이에 대한 북한의 사과에 이르기까지 남북한은 탈냉전적 조류와 냉전적 조류가 상호 교차되어 왔다. 하지만, 잠수함 사건에 대한 북한의 공식적 사과 표명과 남북 관계 개선 천명 이후, 남한은 이를 즉각적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등, 남북한 관계는 다시 완화 단계에 접어들고 통일의 분위기는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이 글은 한반도의 통일을 대비한 남북한 교육의 협력 발전 방안과 방향을 정책적인 측면에서 설정하여 보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첫째, 해방 이후의 한반도의 남북한 성장과 발전의 밑거름 역할을 한 교육은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를 우선 살펴보고, 둘째, 현재의 남북한 교육제도를 통하여 그 유사점과 상이점이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통일을 대비한 남북한 교육 협력 발전을 위한 정책적 방향을 모색하였다.

II. 남한 교육의 성장과 발전

8·15 해방이 남한에게 준 의미는 실로 대단히 크고도 광범위하였다. 정치적으로는 식민지 정치체제에서 민주적 정치체제로 전환되었고, 사회적으로는 폐쇄성에서 개방성으로 나아가게 되었으며, 교육적으로는 주권 국민으로서의 교육 기회를 되찾게 됨으로서 국어를 통한 민주교육의 방향을 정하고 이를 뿌리내리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가시화 되었다(한국교육개발원, 1986: 20).

해방 직후에 취하여진 주요 교육정책으로는 초등 학교 교과서의 편찬과 보급, 6-3-3-4제인 단선형 학제로의 개편, 문맹 퇴치를 위한 성인교육의 실시, 교육자치제의 구상, 의무교육의 실시, 그리고 중등 및 고등교육의 확충 계획 수립 등을 들 수 있다.

정부 수립 이후 새로 제정된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교육 기회의 균등 보장과 초등 무상 의무교육은 당시 남한의 교육 체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방향에 발맞춰 국민교육제도의 근간이 될 교육법이 1949년에 제정 공포되었다. 새로 제정된 교육법에서는 교육제도 전반에 걸친 원칙과 기준으로서 교육 이념과 목적, 행정 체계, 학교의 종류와 계통 등을 규정하였다.

국토 분단의 비극을 안겨다 준 '50년대의 전쟁의 참화와 전쟁 후의 복구의 어려움 속에서도 교육을 중단할 수 없다는 국민의 굳은 의지가 그대로 보여져서 여러 가지 교육정책이 실시되었다. 교육 기본법에 규정된 의무교육의 확대, 실업 기술교육의 강화, 교육 자치제의 강화, 교육 목표의 계속적인 검토, 그리고 교육 내용 및 방법의 개선 등은 이 시대의 특징적인 정책들로서 실질적인 국민 기초 교육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60년대 남한 교육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교육 규모의 양적인 성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의무교육 6개년 계획의 완성으로 초등교육의 경우 거의 모든 학령아가 취학하기에 이르렀고, 중등학교의 경우도 학생 수가 약 3배로 증가하는 양적인 팽창을 보였다. 중등교육의 보편화 추세

에 따라 고등교육은 다른 어떤 수준의 교육보다 학생 수의 급격한 증가를 보였다.

그런데, 이러한 교육 규모의 양적 성장은 과열된 입시 위주의 경쟁적 교육 풍토를 부산물로 낳게 되었다. 이러한 교육 풍토를 개선하고 치열한 입시 경쟁의 장이 된 국민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1968년에 '중학교 무시험 진학 제도'가 채택되었다. 동시에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정책적인 의지로서 동년 10월에 '대학 입시 예비고사 제도'가 종합적인 연구 끝에 실시되었다.

정치, 경제, 사회 등 제 분야에 있어서 체제 정비의 연대로 특징지어질 수 있는 '70년대는 교육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체제 정비를 비롯한 주요한 교육 발전 개혁들이 추진되었다. 주요한 교육 개혁 내용으로는 초·중등교육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들 수 있다. 중학교 무시험 진학 제도의 파급 효과로 인한 중등교육의 보편화 현상은 다시 고등학교 과열 입시 경쟁을 불러 일으켰다. 따라서, 고등학교 평준화를 입시 제도의 전제 조건으로 한 '고교 선발 추천 배정 입시 제도'가 1974년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되었다. 그러나, 적용 지역과 비적용 지역으로 이원화된 고교 입시 제도는 평준화 작업 추진의 미흡으로 인하여 많은 문제점들을 현재까지도 안고 있는 실정이다. 고등교육 분야의 주요 개혁 내용으로는 실험 대학을 통한 대학 개혁을 통하여, 졸업 학점의 감축, 복수 전공제와 능력별 졸업 제도의 도입, 계열별 학생 선발안 등이 도입되었다. 또한 중간 기술 인력의 양성 공급을 위한 단기 고등교육 기관을 정비하여 2내지 3년제 전문대학으로 개편하였다. 개인적 사정으로 인하여 제때에 교육을 받지 못한 이들을 위하여 문을 연 1972년의 '한국 방송통신대학'과 1974년의 '방송 통신 고등학교'는 교육 기회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상당할 정도의 긍정적 효과를 낳았다.

'70년대의 교육 발전을 위하여 단행된 교육 체제의 정비 및 교육 개혁은 '80년대에 들어오면서 교육 정상화 내지는 교육 내실화를 위한 노력으로 연결되었다. 급변하는 사회 변동과 더불어 홍수같이 쏟아지는 새로운 지식에의 추구는 계속 교육 또는 평생교육의 필요성이 점증되었

고, 이에 따라 제5공화국에 들어와 헌법에 평생교육 조항이 명문화되었다. 교육 혁신이 4대 국정 지표의 하나로 설정되었는데, 구체적으로 가시화된 것이 1980년 7월 30일 발표된 '교육 정상화 및 과열 과외 해소 방안'이다. 과외 열풍은 교육의 병폐 현상으로 인식되고 사회·경제적인 물의를 빚고 있는 것으로 여겨져 과외가 전면 금지되었다. 아울러 대학 진학의 문호를 넓히기 위하여 대학 입학 정원을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고등교육 취학율이 약 35%에 이르러 고등교육의 대중화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90년대에 들어오면서, 남한 사회는 급격하게 변하는 양상을 보였다. 정치적으로는 민주화 시대가 개막이 되면서 문민정부가 들어서게 되었고, 이러한 정치적 민주화의 분위기는 사회 저변에까지 파급이 되고 교육 분야에서도 이러한 분위기가 압도하게 되었다. 교육 현장의 민주화와 자율성을 신장하는 정책의 필요성에서 지방 교육 자치제가 다시 부활되었으며, 중등교육의 정상화를 위하여 입시 제도가 새롭게 바뀌어 '대입수학능력시험' 제도와 '학생생활기록부'가 도입되기도 하였다.

남한의 교육 50년의 역사 속에서 그 발전적 의미는 실로 크다고 볼 수 있다. 남한에서의 교육은 그 동안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점들을 안고 있으면서도 한편 모든 국민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확대 제공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자아실현과 인간 복지의 향상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 주었고 나아가 보다 나은 삶을 꾸려 나갈 수 있도록 기본적인 힘을 길러 주었다. 여기에서 길러진 힘은 결과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별로 국가 발전의 바탕이 되고 나아가 민족의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던 것이다(김종철, 1989).

III. 북한 교육의 성장과 발전

북한에서 사회주의 교육이 실질적으로 실시된 것은 해방 이후부터라고 할 수 있다. 1946년 3월 25일자로 당시의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에

의한 “학교사업개선책에 관한 결정서”가 채택되었는데, 이것을 통한 교육정책의 기본 방향은 공산주의 체제를 구축하고 일제의 식민 교육의 잔재를 소탕하기 위한 사상 교육을 “건국사상총동원”이라는 구호 하에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김형찬, 1990a: 116). 1948년 3월 노동당 2차 대회에서는 당과 학교의 교육사업과 사상 교육에 관한 내용이 처음으로 언급이 되었다. 그 내용을 보면, “상설적 당 교육기관인 중앙당 학교와 도당(道黨)학교의 사업 내용을 높이고 강사들의 이론 수준을 높임과 동시에 마르크스-레닌의 이론 학습을 게을리 하는 경향에 대해서는 엄격한 당의 비판을 가하도록 하며 노동계급을 비롯한 노동 인민에게 우리의 과거와 현재의 형편과 사회적 계급 관계를 올바르게 인식시켜 그들의 계급 의식을 높여라”는 것이었다(안진태, 1989: 14).

이러한 정책 방향에 따라 과거의 일제 하의 교육제도를 없애고, 소련의 교육제도를 모방하여 국민학교 5년, 초급 중학교 3년, 고급 중학교 3년, 기술 전문학교 3년, 대학 4년 등 5-3-3-4제라는 기본 교육제도를 수립하고 실천에 옮기기 시작하였다. 이 중에서, 5년제 인민 학교 교육을 1950년부터 의무화하고 기술 교육을 강화하고, 문맹 퇴치를 위한 성인교육을 확대할 것을 최고인민회의 제1차 회의 (1948. 9. 10)에서 발표하였다(김형찬, 1990a: 116).

1950년대의 북한 교육정책의 특징적인 방향은 공산주의를 그들의 실정에 알맞게 정립하고 사회주의에 대한 이념과 계급 교양을 철저히 하여 공산주의 교양에 최선을 다한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이 시기에는 소련의 것을 모방하고, 집단주의를 강조하면서 노동의 신성함을 고취시켜 나갔으며 철저히 공산주의를 북한에 접목시켜 공산주의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인민들의 사상 교양에 심혈을 기울였던 시기이다. 구체적으로, 1953년 전후 복구 건설 3개년 계획을 추진하면서 “연간 의무 노동제”를 채택하여 인민 학교 10일, 중학교 2 내지 4주, 기술계 고등학교 5개월, 대학 3개월의 학생들의 노력 봉사를 강요하였다(김동규, 1988: 389). 1955년 4월에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 회의에서 결의한 “계급 교양을 강화하는데 대하여”에 의하여 학교교육의 목표를 정신 무장과

경제 건설에 두었으며, 1958년 김일성이 행한 “공산주의 교양에 대하여”라는 연설을 계기로 사상 교육이 본격화되었다. 학제 개혁으로는 1953년에 인민 학교 교육 연한을 5년에서 4년으로 단축하고, 1958년부터 의무화하였으며, 곧 이어 중학교 3년 과정을 포함하여 7년제 의무교육을 단행하였고, 각급 학교 수업료를 1959년부터 전반적으로 폐지하게 되었다. 또한, 기술 의무교육제를 실시할 준비를 하도록 한 결정(내각결정 제 121호, 1958. 10. 9. 김형찬, 1990a: 117에서 재인용)한 이후, 근로자 중학교를 농촌과 주요 직장에 설치하고 기존의 성인 학교를 근로자 학교로 개편하는 한편, 통신교육을 강화하였다.

1960년대에 들어서는 북한은 정치적으로 김일성 유일 체제를 강화하고 경제적 부흥에 박차를 가하면서 교육정책의 기본 방향으로서 혁명전통교양이라는 사상 교육을 새롭게 학교교육의 중심 과제로 삼으면서 노동 교육과 생산 기술교육을 강조하였다. 1960년부터 교육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편하여 정규 학교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일반 교육 체계와 예·체능계 교육과 혁명 유자녀 학원 등을 포함하는 특수교육 체계, 그리고 근로자 중학교, 야간 기술 학교, 야간 및 고등 기술 통신 학교, 공장 대학 등을 포함하는 성인교육 체계로 구성되었다. 1961년 9월 제 4차 노동당 대회에서는 북한 교육정책의 기본 방향으로서, 이론과 실천 그리고 교육과 생산 노동이 결합된 새 인간 육성, 일반 지식과 더불어 기술 교육의 강화, 혁명 전통 교양의 강화, 문화혁명 수단으로서의 성인교육 강화, 교육 부문에서의 ‘천리마 운동’의 강력한 추진과 학생 의무 노동제의 엄격한 준수, 그리고 학원에 대한 당 지도의 강화를 통한 교원 및 학생들의 당성 교양 등이 채택되었다 (안진태, 1989: 17-18). 1967년부터는 “전반적 9년제 기술 의무 교육제”(1966. 1. 1. 공포)가 시행됨으로써, 기본 학제가 4-5-2-4제가 되었다. 1960년대 말부터는 사상 교육에서 당의 유일사상이라는 김일성 주체 사상이 학습의 중심 과제가 되었다. 전 사회의 혁명화, 노동 계급화, 공산주의화를 강조하며 김일성의 혁명사상이 곧 당의 유일 사상이요,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창조적인 실천의 표현이라고 주장하면서 당의 유일 사상 체계를 세우고자 학교 내

외에서 사상 교양 교육을 더욱 강화하게 되었다.

1970년 「노동당 제5차대회」를 계기로 김일성 주체 사상 혹은 당의 유일 사상이 교육의 기본 원칙과 정책 노선으로 표방되기 시작하였다. 1972년에 전반적 10년제 고중 의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결정하였는데, 이 개혁이 단계적으로 실행에 옮겨져 1975년에 완성되자 곧 이어 유치원 1년(높은 반)의 의무교육을 계속할 방침을 세워 11년제 의무교육을 전면적으로 확대 실시할 것을 결정하게 되었다. 이어서, 1976년에는 「어린이 보육교양법」을 제정하여 유아교육에 치중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김일성 유일 사상의 효과 극대화를 위한 조치로 간주된다. 김일성 주체 사상의 원칙과 노선은 1977년 9월 5일 조선 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회주의 교육의 지침서라 일컬을 수 있는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가 공포됨으로써 제도화되었다.

1980년 「노동당 제6차대회」에서 혁명적 영수관이라는 후계 이론과 더불어 김정일이 김일성의 후계자로 공식화되면서, 김정일 숭배에 대한 정치사상 교육이 본격화되었다. 김일성-김정일 부자 세습 체제를 공고화하며 교육에 있어서 인간 개조론이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1985년 북한이 조선로동당 창건 40돌을 기념하여 발간한 「인간개조리론」에 따르면, “인간개조론은 주체 혁명 이론의 중요 부분의 하나로서, 인간 개조 문제는 자주성을 위한 혁명 투쟁,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이론, 실천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라고 밝히고 있다(안진태, 1989: 21에서 재인용).

1990년대에 들어서서 유일 사상 체계가 확립되고 김부자 후계 구도가 정립됨으로써 북한의 교육정책은 김정일의 주도적인 역할에 의하여 형성되고 있다. 오늘날 북한은 ‘우리식 사회주의’에 입각한 정치사상 교육을 강화하고, 고등교육의 확대와 경제 개발을 위한 기술교육의 강화가 강조되고 있다.

해방 이후 오늘날까지 북한의 체제를 유지시켜 온 것은 다분히 나름대로의 강력한 사회주의 교육의 덕이라고 볼 수 있겠다. 주체 사상과 수

령론에 입각한 끊임없는 정치사상 교육과 현실적인 기술교육 강화는 북한 사회의 일종의 울타리 역할이 된 셈이다.

IV. 남·북한 교육제도의 비교 분석

1. 교육제도의 기본 구조

남·북한 교육제도는 구조적인 측면에서 약간의 체계를 달리하고 있다. 남한은 취학전 교육 체계, 학교교육 체계, 사회교육 체계로 대별되는 데 비해서, 북한은 취학전 교육인 학교전 교육 체계, 학교교육 체계, 성인 교육 체계 그리고 사회교육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남한은 교육제도를 정규 학교교육 체계 위주로 구조화하여 왔으며, 점차로 취학전 교육, 사회교육 체계도 중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데 반하여, 북한은 학교교육뿐만 아니라 취학전 교육, 성인교육 그리고 사회교육도 함께 중시한 총체적 교육 체계를 구조화하고 있다.

2. 학교제도의 구조

남한의 기본 학제를 보면 국민학교(6년)와 중학교(3년)를 보통교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고등학교(3년)는 고등 보통교육(인문계열)과 전문교육(실업계열)으로 구분되어 있다. 고등교육 단계에서는 대학(4~6년), 교육대학, 사범대학과 전문대학(2~3년)으로 구성된다. 고등학교 단계에서 방계 학제에 속하는 교육기관은 방송 통신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산업체 부설 특별 학교(학급) 및 각종 학교가 있다. 또한, 고등교육 단계에서 방계 학제에 속하는 교육기관으로는 방송통신대학과 개방대학이 있다.

북한의 기본 학제는 인민학교 4년, 고등중학교 6년, 대학 3~6년으로

서 4-6-4제의 기본 구조를 구성하고 있다. 유치원의 경우 낮은 1년, 높은 1년으로 구분하여 낮은 1년은 의무교육 대상이 아니나 높은 1년은 의무교육으로 운영되고 있다. 인민 학교는 남한의 국민학교에 해당되는 초등교육 단계로서 수업 연한은 남한의 6년보다 비교적 짧다. 고등중학교는 남한의 중·고등학교를 통합한 형태로서 중등교육 단계에 해당되며, 편의상 중등반 4년과 고등반 2년으로 구분되어 있다. 고등교육 기관은 기술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3년제 전문학교, 4~6년제의 일반 대학, 3년제 교원 대학, 4~6년제의 일반 대학, 3년제 교원 대학, 4~5년제의 사범대학으로 구성된다. 한편, 특수 목적 교육 체계 안에 있는 특수 영재 교육 기관으로는 11년제로 운영되는 무용 학교, 음악학교, 조형예술 학교가 있으며, 7년제인 외국어 학교, 4년제인 체육학교가 있다. 특수층 자녀를 위한 교육기관은 11년제로 운영되는 만경대혁명학원과 강반석혁명학원 등이 있다.

남한과 북한의 학교 제도는 양 체제의 사회적인 성격과 교육제도의 변천 과정을 거쳐서 발전하였기 때문에 독자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서로 나뉠대로의 유사점과 상이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학교 단계별 교육 연한을 비교하여 보면, 남한은 초등 6년, 중등 6년, 고등 4년인데 반하여, 북한은 초등 4년, 중등 6년, 고등 4년으로서 초등 학교 단계에서 북한은 남한보다 2년이 짧다. 둘째, 중등교육 단계에서 남·북한은 모두 전기와 후기를 구분하고 있지만, 남한은 전기 3년, 후기 3년으로 구분하는데 비해서, 북한은 전기 4년, 후기 2년으로 구분하고 있다. 셋째, 개인의 직업이나 진학을 위한 진로 분화의 시기를 보면 남한은 중등 후기에 진로 분화가 이루어지는데 비해 북한은 중등 후기까지 진로 분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넷째, 북한에서는 학교 제도 안에서 특수 목적을 위한 학교 체계가 명확하게 명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기 분화 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비해서, 남한은 그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북한보다는 만기에 분화되고 있다(최영표, 1993).

3. 취학전 교육제도

남한과 북한의 교육제도 가운데 취학전 교육은 다른 분야에 비해 유사점보다는 상이점이 훨씬 많다. 현재 취학전 교육에 대한 국가의 기본 정책을 살펴보면, 남한은 원칙적으로 개인의 선택과 자유의사에 맡겨져 있는데 비해서, 북한은 거의 전적으로 국가의 지원 아래 운영되고 있다. 북한은 법적으로 취학전 교육을 국가와 사회 부담으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취학전 1년의 교육을 11년 의무교육 연한 속에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계획적인 지도 지원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4. 의무교육제도

의무교육의 개념에 있어서 남·북한 간에 유사점과 차이점이 약간 있다. 우선 남·북한은 교육권을 보장한다는 점과 의무교육 대상 학교의 균등 배치, 취학과 이의 보장 의무, 그리고 의무교육을 받지 못한 학령 초과자에 대한 교육 시책 강구 등에 있어서는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내용과 조건 면에서는 차이점이 있다.

취학 의무에 있어서는 남한이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서 의무교육이 강제 교육의 성격을 띠면서 적령 아동에 대해서는 취학 의무를 부과하며 아동의 부모에게 취학시킬 의무를 강제하고 있다. 반면, 북한은 의무교육 대상자들을 빠짐없이 교육시킨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의무 교육 보장을 위한 요건 구비 측면을 보면, 남북 모두가 관련 규정을 두어 실질적인 의무 교육을 실현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북한이 보다 구체성을 띤다. 남한은 재능 있는 학생으로서 학비가 곤란한 자를 위해서 장학금이나 학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 조건의 구비에 한정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북한은 이러한 규정은 없지만 학용품까지도 제공하고 통학이나 기술 생활을 위한 생활비용까지도 제공하여야 함으로써 무상성의 개념을 생활비용까지 제

공하는 수준으로 확대하고 있다(최영표, 1993: 85).

의무교육의 관리·지원 체제에서도 남·북한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북한의 경우에는 의무교육 행정에 있어서 당이 주요 정책을 결정·감독하고, 교육행정 기관이 이를 집행하고 관리·지원하는 형태를 취한다. 따라서, 의무교육 행정기관의 성격을 지닌 교육위원회에 의한 운영 형태를 취하고 있는 남한과는 다르다.

5. 고등교육제도

먼저 고등교육 부문에서 남한과 북한은 교육 기회의 확대 정책을 추구하는 점에서 유사성을 갖고 있다. 남한은 1980년 이후 고등교육의 정원 확대에 따라 교육 기회가 대폭적으로 확대되었으며, 북한도 '온 인민의 인테리화'라는 구호 아래 고등교육의 확대 정책을 추진하였다. 북한의 대학 수도 역시 남한과 마찬가지로 1980년대에 확대되었다.

고등교육의 성격과 기능 면에서 남·북한은 엘리트 양성의 측면과 대중 교육기관으로서의 측면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남한의 대학은 그 교육 여건과 질적인 수준이 다양하고 차이가 크게 때문에 다양한 성격과 기능을 가지고 있다. 4년제 대학을 중심으로 대부분 전문인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학교의 특성과 질적인 수준이 매우 다양하다. 아울러, 전문대학, 개방대학, 방송 통신대학 등은 전문 직업인을 양성하는 대중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북한의 경우에 있어서 김일성종합대학과 같은 엘리트 양성 대학은 국가에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받아 질적으로 대단히 우수한 교육 여건을 확보하고 있다. 반면에 성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각종 공업대학, 공장대학 등은 교육 기회를 폭넓게 제공할 수 있는 대중적 성격을 띠고 있다. 남한의 고등교육기관은 정규 대학 중심으로서 학문 탐구와 이론에 치중하고 있는 반면에, 북한은 성인교육 중심으로 생산 현장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실제적으로 유용한 직업 기술을 습득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6. 성인교육제도

남·북한의 성인교육 제도를 살펴보면, 남한은 학습자의 교육적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는 반면에, 북한은 '온 인민의 인테리화'라는 국가의 강력한 정책에 따라 발전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남한의 경우에는 성인교육에 대한 학습자의 요구는 학력 보충, 직업훈련, 개인 교양, 취미·오락 등 다양한 방면에 걸쳐 표출되고 있기 때문에 성인교육의 형태도 매우 다양하다. 한편, 북한은 성인교육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목표가 학력 보충, 직업훈련, 정치사상 교양으로 요약될 수 있다. 북한의 성인교육 가운데 개인의 취미·오락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 활동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남한은 북한에 비해서 교육과 노동의 결합이 그렇게 긴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학력 보충을 위한 성인교육인 방송통신고등학교, 산업체 부설 학교, 방송 통신은 대부분 생산 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그 학교의 운영과 내용 면에서 생산 현장과 연계되는 측면은 거의 없다.

성인교육을 위한 교육비 부담 면에서 북한은 국가와 산업체의 지원이 전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비해서, 남한은 국가와 산업체의 부담도 있지만 교육 수혜자의 자비 부담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 국가가 운영하는 직업훈련 기관은 전적으로 국가가 지원하지만, 학력 보충을 위한 교육기관은 국가 지원과 학생의 실비 부담이 병행되고 있다. 북한은 성인교육이 국가의 정책적 지원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교육비 부담은 국가가 지원하게 된다.

V. 통일을 대비한 남·북한 교육 협력 발전의 정책적 방향

이상의 남·북한의 교육의 성장 및 발전상, 그리고 현재의 남·북한간의 교육 제도적인 유사점과 상이점을 살펴보면, 다가오는 한반도의 통일

시대를 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보다 바람직하고 현실적인 남북한 교육 통일을 위한 단계적 과제를 설정해야 할 당위성을 갖는다. 물론 남북한 교육 통일을 위한 단계적 과제를 정함에 있어서 전제되어야 할 사항이 있다. 그것은 정치적 측면에서의 남북통일에 관한 방안의 결정과 이에 따른 교육 통일 방식의 설정이다.

지금까지 학계에서 남북통일을 위해 논의되고 있는 방안들은 크게 3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박용현, 1992: 2-6). 그것은 「흡수에 의한 통일」, 「장기 공존에 의한 통일」, 「협상에 의한 통일」이다. 이 중에서 가장 이상적인 것은 「협상에 의한 통일」방안이지만 남북한 쌍방이 현재 각기 자기의 이념과 체제하에 통일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협상에 의한 통일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흡수에 의한 통일」은 남한이나 북한의 한쪽 이념과 체제에 의해서 상대방을 흡수하여 통일하는 방안인데, 이 방안은 마치 서독에 의하여 동독을 흡수 통일한 방법과 같다. 이 방안은 비슷한 여러 선택들을 고려하여 볼 때에, 현실성이 무척 높은 방안이기는 하지만, 통일 후의 통독의 막대한 후유증 등을 목격하면서 이러한 「흡수에 의한 통일」방안은 가능한 대로 피하고 싶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방안이다. 더구나,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듯한 북한 경제의 파탄은 통일 후 상대적으로 남한의 부담을 그만큼 강요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이러한 「흡수에 의한 통일」방안이 한반도에서는 가장 비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장기 공존에 의한 통일」방안은 현재와 같은 남북한의 이질적 이념과 체제를 서로 인정하고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 가면서 통일의 기반을 구축해 가는 장기적 구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방안은 「흡수에 의한 통일」방안의 현실성이 비현실적으로 바뀔 때에, 그리고 현재의 남북한 양측이 통일 방안을 논의하는 방향을 고려해 볼 때에 현실성이 매우 높은 방안임을 알 수 있다. 남북한이 UN에 동시 가입하여 서로의 체제를 인정한 셈이 되었고, 남북한 쌍방이 제시하고 있는 통일 방안도 아직은 서로가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북한 측이 1991년에 제안하고 있는 「고려민주연방공화국안」수정안이나 남한측 정부가 1993년에 발표한 바 있는 「3단계

3기조」통일 방안의 기본적인 개념들은 이러한 「장기 공존에 의한 통일」 방안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들 통일 방안에 따른 교육 통합의 방식도 각각 「흡수 통합 방식」, 「연방식 통합 방식」, 「표준 교육 체제 통합 방식」 등의 명칭으로 분류될 수 있다(문용린, 1993: 2-4). 교육의 「흡수 통합 방식」은 북한에 대한 남한의 흡수에 의한 통일을 전제한 것으로 우리의 교육 체제에 따라 북한의 교육 체제를 개편하는 방식이다. 「연방식 통합 방식」은 장기 공존에 의한 통일 방안에 따른 것으로 북한 내부의 돌출적인 사태의 변화 없이 현행 체제가 장기간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쌍방의 교육의 체제를 인정하고 나아가 양체제 간의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차이를 점점 줄여 가는 방식이다. 「표준 교육 체제 통합 방식」은 남북한 양측의 협상에 의한 통일 방안에 따른 것으로 남과 북의 대표가 협상 테이블에서 만나 새로운 교육 체제를 구상하고, 이 체제로의 통합을 위하여 통일 이전부터 양측이 구체적 계획을 세워 각각의 현행 교육 체제를 점차적으로 바꾸어 나가는 방식이다.

전술하였듯이,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정치적 통일 방안 중에서 「장기 공존에 의한 통일」방안이 가장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 같으며, 또한 이에 따른 교육 통합 방식도 「연방식 통합 방식」이 선호될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이 글에서의 남북한 교육 통일을 위한 단계적 과제도 이러한 점은 염두에 두고서 논의를 하려고 한다.

남북한 교육 통일을 위한 단계적 과제로서 다음과 같은 5단계 방안이 제시될 수 있겠다. 그것은 첫째, 교육권에서의 대화와 개방의 단계, 둘째, 교육권의 교류의 단계, 셋째, 교육권의 협력의 단계, 넷째, 교육 통합의 단계, 다섯째, 교육 통일의 단계이다. 이들 각 단계에서의 거론되어야 할 내용과 방법, 그리고 정책적 과제는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단계인 교육권의 대화와 개방의 단계에서는 남북교육공동체적 의식 속에서 상대방의 교육 내용과 교육 체제 및 교원의 역할 등에 관한 집중적 연구와 토론, 그리고 다음 단계인 교육의 교류를 위한 방법과

내용이 충분히 논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제3국 혹은 국제적인 교육 행사장 등을 이용하여 남북 교육 학술회의를 상호간에 제의하고 이를 개최토록 한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의 정책적 과제는 통일을 위한 교육 관련 연구 지원비 확충과 아울러 통일원과 교육부에 합동 기관인 통일 교육국을 설치하고 이론적인 뒷받침을 위해 통일 교육 자문교수위원회를 구성토록 한다. 또한, 남북 교육의 대화와 개방을 위한 실무를 위해 남북 교육 통일 연구 조정 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단계인 교육권의 교류의 단계에서는 교육 자료 및 교육 정보 교환이 자연과학과 공업 기술 분야에서부터 시작하여 점차 인문 사회과학 쪽으로 전환해 나가며, 다음 단계인 협력 단계에서의 구체적인 방안도 쌍방 공동으로 논의한다. 이 단계에서의 교류 방법으로는 교육 관계자 상호 왕래 및 상호 교류, 수학여행 및 고적 답사, 남북 학생 공동생활 경험 유도 등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 단계에서의 정책적 과제는 전 단계인 대화와 개방 단계의 남북 교육 통일 연구 조정 위원회를 남북교육교류위원회로 변경 설치토록 하며, 다음 단계의 남북 교육 협력을 위한 교육 재원을 마련토록 한다.

셋째 단계인 교육권의 협력 단계에서는 남북 친선공동학술연구 실시나 발표, 국제적인 교육행사장에서의 남북한 단일 대표팀 구성 등을 통한 보다 친밀한 교육 협력 관계를 구축하며, 다음 단계인 교육통합 단계를 위해 쌍방 교육권의 공동협력 하에 한반도 교육 통합 모형을 교육 체제 중심으로 개발토록 하고, 이러한 교육 통합 모형을 실현화하기 위한 교육통합비 산출과 비용 확보책을 공동으로 결정한다. 이 단계에서의 정책적 과제로는 전 단계의 남북교육교류위원회를 남북교육협력위원회로 변경 설치하고, 다음 단계인 남북 교육 통합을 위한 교육 재원을 마련토록 한다.

넷째 단계인 교육 통합 단계에서는 교육의 연방화를 중심으로 한 교육 통합을 위한 실천 사항을 준수하고, 국민투표 등을 통한 범국민적 합의의 기초로 교육 통일 모형을 정립화하도록 한다. 이 단계의 정책적 과제로는 전 단계의 남북공동교육협력위원회를 남북 교육 통합 집행 및

교육 통일 준비공동위원회로 변경 설치 운영하고, 이 위원회를 중심으로 다음 단계인 교육 통일을 위한 교육 재원을 마련토록 한다.

마지막 단계인 교육 통일의 단계에서는 교육 통일 모형을 준수하고 이를 위해 지속적이고도 일관성 있는 교육 재원의 확보와 더불어 공정한 교육 재정 재원의 배분이 가능하도록 한다. 교육 통일 모형 준수를 위한 전 단계의 남북 교육 통합 집행 및 교육 통일 준비 공동위원회를 한반도 교육 통일 집행 및 평가 위원회로 개칭하여 운영토록 한다.

이러한 5단계를, 실천하는데 있어서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은 한 단계를 지나서 다음 단계에 들어섰다고 하여 그 전 단계의 정책적 과제가 아주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전 단계의 과제는 계속성과 연속성을 가지고 강화가 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교육 통합의 단계에서도 남북한 양측의 교육의 대화나 교류 및 협력이 새로운 차원에서 끊임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참 고 문 헌

- 김갑철, 1990, 『북한학개론』, 서울, 문우사
- 김동규, 1990, 『북한의 교육학』, 서울, 문맥사
- 김동규, 1988, 『북한의 사회주의 교육학』, 서울, 주류
- 김일성, 1978, 『김일성 저작선집 7권』, 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 김종철, 1989, 『한국교육정책연구』, 서울, 교육과학사
- 김태완, 1992, 「교육통합의 가능모형- 학교제도 측면」, 한국교육학회
교육행정학연구회 제22차 연차학술대회 발표논문
- 김형찬, 1990a, 『북한의 교육』, 서울, 을유문화사
- 김형찬, 1990b, 『북한의 주체교육사상』, 서울, 안백사
- 박문갑 외, 1987, 『남·북한 비교론』, 서울, 문우사,
- 박용현, 1992, 「남북통일의 전망과 교육통합」, 한국교육학회 교육행
정학연구회 제22차 연차학술대회 기조강연
- 안진태, 1989, 『북한의 취학전 아동교육에 관한 연구』, 석사논문, 고
려대학교
- 오욱환, 1991, 「교육과 사회 변화의 관계에 대한 이론의 비교와 분류」,
교육학연구, 29.1, pp.167-185
- 이윤식, 1992, 「교육통합의 가능모형- 교원 측면」, 한국교육학회 교
육행정학연구회 제22차 연차학술대회 발표논문
- 임천순, 1992, 「교육통합의 가능모형- 교육재정 측면」, 한국교육학회
교육행정학연구회 제22차 연차학술대회 발표논문
- 통일원, 1992, 『'92북한개요』
- 최영표 외, 1993, 『통일에 대비한 교육정책 연구, II』, 한국교육개발
원, 연구보고 pp. 93-8
- 최은수, 1993, 「북한교육정책의 성격과 한반도 교육통일예의 방안」,
통일연구, 창간호, 숭실대학교 통일문제연구소
- 한국교육개발원, 1986, 『2000년을 향한 국가장기발전구상』, 한국교
육개발원
- 황정규 외, 1990, 『북한교육의 조명』, 서울, 법문사

Abstract

Developmental Steps with Reference to Policy Implications for the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f Educ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toward the Unification

Choi, Eun-Soo

The study analyzed the educational growth of South and North Korea since 1945, compared their educational systems, and suggested developmental steps with reference to policy implications for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f educ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preparing for the coming unification in Korean peninsula.

Meaning of educational development in South Korea for the past 50 years can not be overlooked. Thanks to educational growth, expansion of educational opportunity and, therefore, pursuit of happiness and social well-being for all the people could be possible, despite a lot of educational and social problems residing in its society.

In the case of North Korea, it appears that its own system for socialist education has firmly contributed to maintenance of the social system. Endless and continuing political ideology education based on Juche ideology and Suryongron (Head leadership theory) and simultaneous focus on technology education have played a role to become a strong fence for protecting North Korea.

Developmental steps in education field toward educational unification of Korea with reference to policy implications were suggested: the first stage of opening and communication each other; the second stage of exchange each other; the third stage of co-operation together; the fourth stage of uniting; the fifth stage of unifying into one.